

프랑스의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법적 대응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이두형 (프랑스 루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여름 바캉스 기간을 맞아 많은 프랑스인들이 휴가를 즐기는 동안 프랑스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장기화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구매력법(loi pour pouvoir d’achat)”과 “2022년도 수정 예산안(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2)”을 처리하기 위해 약 3주 동안 격렬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마침내 지난 2022년 8월 3일 프랑스 국민의회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공식 절차는 마무리됐다.¹⁾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일부 내용은 수정이 요구되나 전체적으로 큰 차질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범좌파연합인 뉘프(NUPES)와 프랑스 사회당(PS)을 중심으로 각 60여 명의 국회의원과 상원의원이 이번 “구매력법”에 담긴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 특정 위기상황이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를 했다.²⁾ 문제가 된 내용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위기에 처할 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상향할 수 있으며 르아브르 시에 위치한 부유식 LNG 터미널의 경우 환경법(Code de l’environnement) 적용에서 배제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환경보호는 국가의 다른 이익들과 같은 수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이 같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구매력법”이 승인되었고, 그 외의 세부 내

1) LeMonde, “Pouvoir d’achat : ce que contient le projet de loi adopté à l’Assemblée nationale et au Sénat”, 2022.8.3.

2) LeParisien, “Loi pouvoir d’achat : après les députés Nupes, les sénateurs PS saisisse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2022.8.8.

용들은 계획대로 전개될 전망이다.³⁾

■ 프랑스 인플레이션 상황

올 상반기 내내 상승세를 그리던 인플레이션은 7월에도 이어졌다. 프랑스 통계청이 2022년 8월 1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프랑스 물가상승률은 2021년도 같은 기간 대비 6.1% 올랐고, 앞선 6월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는 0.3% 상승했다.⁴⁾

그나마 물가상승세를 주도했던 에너지 비용 상승세가 주춤하다는 것이 위안거리다. 2022년 7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대비 28.5% 상승했지만 앞선 6월의 상승률은 33.1%에 달했다. 이는 휘발유와 등유, 가스 등의 가격이 비록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그 기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2년 휘발유의 경우 6월에는 전년대비 35.9% 오른 반면 7월에는 25.5% 상승에 그쳤다. 등유는 6월 45.9%에서 7월 37.6%, 가스의 경우 49.3%에서 42.4%로 상승 속도를 늦춘 모양새가 보였다. 다만 이는 중국 경제활동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석유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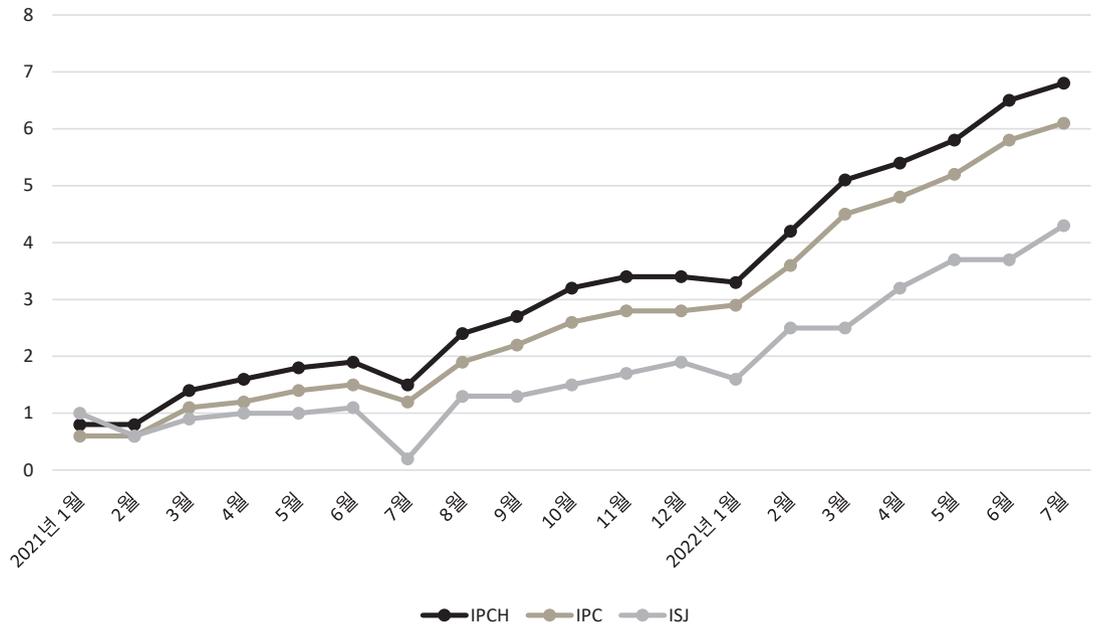
최근 몇 개월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는 약 1년 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이러한 물가 상승은 중요한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보면 프랑스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한 차례 하락세를 기록한 뒤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하반기의 물가상승세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든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움츠렸던 경제활동이 빠른 속도로 활력을 되찾으며 물가상승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시장 내에 과

3) BFM TV, “Loi pourvoir d’achat : le conseil constitutionnel rappelle l’État à ses devoirs en matière d’environnement”, 2022.8.14.

4) INSEE(2022), “En juillet 2022, les prix à la consommation augmentent de 0,3% sur un mois et de 6,1% sur un an”, <https://www.insee.fr/> (2022.8.14).

5) Franceinfo, “L’inflation s’est accélérée en juillet pour atteindre 6,1% sur un an, confirme l’Insee”, 2022.8.12.

[그림1] 2021~2022년 월별 프랑스 소비자 물가지수(IPC), 근원인플레이션(ISJ), 소비자 물가 조화 지수(IPCH)
(단위: %)



자료: INSEE(2022).

잉수요가 나타난 반면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을 낳았다. 이는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생산과 운송 등 경제활동 다방면에서 소비가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면서 야기된 결과라는 설명이다.⁶⁾

2022년 1월에 다시 한번 주춤하다 2월부터 앞선 물가상승세보다 가파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지난 2021년 상반기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2021년 2월 24일부터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전쟁으로 프랑스 에너지 분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러시아산 에너지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비용은 물론 시장 전반의 물가상승세를 부채질한 것이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브뤼노 르 메르 장관은 지난 2022년 8월 4일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

6) Franceinfo, “L'article à lire pour comprendre pourquoi l'inflation décolle avec la reprise de l'activité économique post-crise du Covid-19”, 2022.4.10.

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달려 있다.”라며 특히 “대체 석유와 가스 등 다변화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악화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그 파급효과가 프랑스 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쟁이 끝날 시점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르 메르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2023년 초 들어 인플레이션 완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2022년 말까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⁷⁾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요인뿐 아니라 프랑스 내부요인도 물가상승세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22년 여름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은 농업과 목축업 등에 타격을 가하며 식자재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프랑스 농무부 산하 농업통계청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수자원이 고갈되면서 2022년 6월 목초지는 평년 대비 21%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2022년 5월 기준 젖소 사료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9%가 올랐고 이는 전반적인 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⁸⁾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식자재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올랐다. 6월 식자재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5.8%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서 구매력 이슈는 특정 시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길게는 1년 가까이 축적된 문제이며, 더군다나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 정치권은 시민들의 구매력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 프랑스 구매력 강화 법안 내용

“구매력법(loi pourvoir d’achat)”을 시행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면서 “2022년도 수정 예산안(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2)”이 함께 처리됐다. 이름에서도 알 수

7) Franceinfo, “L’inflation forte va continuer à augmenter jusqu’à la fin de l’année”, affirme Bruno Le Maire”, 2022.8.4.

8) TF1, “Inflation : pourquoi le prix du lait devrait continuer d’augmenter”, 2022.8.9.

있듯 “구매력법”은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프랑스 시민들의 구매력을 증진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또는 간접 방식의 경제적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해당 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약 200억 유로(한화 약 26조 7,806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연금 및 사회보장 혜택 강화⁹⁾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은퇴연금을 비롯해 “가족수당”, 만 18세에서 24세 사이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RSA)”, 20세 이상부터 해당이 되는 “성인 장애인수당(AAH)”, “고령자 연대수당(ASPA)”, 학생 장학금 등을 4% 인상한다는 부분이다. 해당 방안은 지난 7월분부터 소급되어 적용된다. 또한 “개인 주거 보조금(APL)”과 “가족 주거 보조금(ALF)”, “사회적 주거 보조금(ALS)” 등 주거 보조금은 3.5% 오르면서 상승하는 임대료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프랑스 본토 임대료 상승률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3.5%(해외영토 2.5%)로 제한하는 방안과 발맞춘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인상된 은퇴연금은 2022년 9월 9일부터 지급된다. 그 외에 사회보장 혜택은 앞선 7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앞서 7월에 지급되지 않았던 인상분이 제공된다. 이어 9월 5일부터 인상된 내역이 반영되어 수혜자에게 돌아간다.

사회보장 혜택 인상을 누리는 수혜자도 상당할 전망이다. 은퇴연금 이상의 혜택을 받는 은퇴자는 약 1,4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생활 급여로는 1,900만 명, 성인 장애인수당은 1,200만 명, 가족수당은 약 500만 가구가 적용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 보조금은 총 650만 명, 그중 개인 주거 보조금으로만 350만 명이 인상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¹⁰⁾

9) Vie-publique(2022), “Projet de loi portant mesures d’urgence pour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https://www.vie-publique.fr/> (2022.8.14).

10) LeParisien, “Pourvoir d’achat : les deux lois majoritairement validées, avec réserve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2022.8.12.

성인 장애인수당과 관련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그동안 배우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지급하던 방식을 폐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장애인의 자립심과 주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해당 기준이 삭제되면서 성인 장애인은 배우자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최대 매월 904유로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안은 늦어도 내년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¹¹⁾

초과노동 휴가(RTT) 대신 수당 지급 가능¹²⁾

“초과노동 휴가(RTT)”는 법정노동 시간인 주 35시간 이상 노동했을 경우, 그에 상응해 사용자와의 동의하에 노동자가 휴가 또는 반차를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¹³⁾ 이와 관련해 “구매력 법”은 노동자가 초과노동 휴가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을 휴가가 아닌 임금으로 대신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는 소득은 1년에 최대 7,500유로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초과노동 휴가를 임금으로 받는 것 자체가 새로운 방안인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에는 이러한 임금 또한 소득세나 사회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는 이렇게 초과노동 휴가로 얻은 소득의 경우 납세와 사회분담금 의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우파 진영과 좌파 진영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좌파 쪽에서는 사실상 노동시간 인상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우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초과노동 휴가를 임금으로 받음에 따라 기본소득이 늘고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여당 쪽에서 애초 제시한 방안은 이 같은 초과노동 휴가의 임금화를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2025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11) Franceinfo, “Pourvoir d’achat : retraites; loyers; rachat des RTT... Ce que contiennent les projets de loi définitivement adoptés par le Parlement”, 2022.8.5.

12) LeMonde, “Le rachat de RTT, une mesure qui bénéficiera surtout aux cadres”, 2022.8.5.

13) Service-Public(2021), “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RTT)”, <https://www.service-public.fr/> (2022.8.15).

공무원 임금 지표(point d'index) 조정¹⁴⁾

앞서 2022년 6월 28일 프랑스 혁신 및 공공서비스부 스타니슬라스 게리니 장관은 공무원 임금 지표를 3.5%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는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으로 75억 유로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매력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내용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난 7월 임금부터 소급된다. 해당 안에 따라 약 57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임금인상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저임금(SMIC) 수준의 임금을 받던 70만 명가량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거두며 그에 따라 공적영역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없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자영업자(indépendant)의 사회분담금 축소¹⁵⁾

수공업자와 소매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 등 자영업자 약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분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이들 수입이 최저임금(SMIC) 수준에 그치면 1년에 약 550유로의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분담금 감축은 2022년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반영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프랑스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면서 “구매력법”에서 에너지 대책은 중요한 축을 이룬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리터당 0.18유로(한화 약 241원) 할인액은 2022년 9월과 10월에는 0.30유로로 증가하며, 11월과 12월에는 다시 0.10유로로 낮춰 적용된다. 또한 2021년 10월 가격을 기준으로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전기료 인상률을 4%로 제한하는 조치도 올해 내내 시행된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름 난방을 쓰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더불어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입된 일명 “마크롱 보너스”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

14) Ministre de la transform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Augmentation généralisée du point d'indice des agents publics”, <https://www.transformation.gouv.fr/> (2022.8.15).

15) LesÉchos, “Les mesures d'urgence sur le pouvoir d'achat”, 2022.8.8.

용도 담고 있다. “마크롱 보너스”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납부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를 모든 기업에서 최대 3천 유로, 이익 공유제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최대 6천 유로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수신료를 면제하면서 각 가구당 138유로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수정된 예산안을 통해 새로운 핵 발전소 건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프랑스전력공사에 97억 유로를 투입해 지분 확보를 83.9%까지 늘리며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노동자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내용들로, 이를 중심으로 이번에 마련된 법안을 살펴봤다. 이는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 비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변수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롭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국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KLI**